

# 북한의 對日外交政策

全 東 震\*

## ◁ 目 次 ▷

- |                        |                                 |
|------------------------|---------------------------------|
| I. 서                   | III. 북한의 대일정책 현안                |
| II.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목표 및 기초 | IV. 결론: 일·북한 수교 및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전망 |

## I. 서

최근 북한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혁명적인 변화와 탈냉전의 신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거의 정책노선을 수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개혁과 개방을 실천하여 왔다. 특히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수용과 일본과의 수교협상 개시는 한반도에서 남북한공존체제를 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북한 대외정책의 주요 전환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북한 핵문제가 난관에 봉착하여 수교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북한수교 교섭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북한의 대일정책 목표를 분석하고, 이 목표에 따라 북한이 실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제로 추진한 대일정책을 시기별로 고찰한다. 양국간의 현안사항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해결전망을 살펴 본후 북한의 대일정책을 종합 전망한다.

## II.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목표 및 기초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미·일의 정치 군사적 결속 이완, 둘째,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정책 유도, 셋째, 서방측 선진 자본과 기술 도입, 넷째, 대미관계개선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은 대일외교정책 기초로서 대일관계개선 및 국교정상화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기초는 일본의 한미와의 유대관계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 1. 한미일 협조체제 이완 및 일본의 대북한 적대시정책 포기 유도

북한의 대일정책 목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극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인 일본과 미국간의 정치 군사적 연계를 최대한 이완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 11월 3일 노동당제5차대회의 김일성 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sup>

북한은 미일의 정치, 경제적 협조체제와 미일상호방위체제를 북한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일간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소위 “남조선 해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간주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3각동맹체제 저지 및 이간을 위한 대일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로동신문, 1970. 11. 4.

북한은 이처럼 한미일 3각동맹체제 저지 및 이간을 위한 대일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북한은 일본과의 비정치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둘째, 일본내의 좌경세력과 연대하여 일본의 한미와의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도록 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였으며, 셋째, 북한노동당의 지원아래 1955년 5월 25일 도쿄에서 결성된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를 북한의 대남, 대일정책 수행을 위한 일본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일본과의 비정치 교류 활성화와 관련, 북한은 1951년 5월 10일 도쿄에서 당시 참의원 우쓰노미야 등을 중심으로 「일조우호협회」를 결성하였으며, 1954년 일본평화옹호위원회 오카다 하루오 및 구시다 후끼가 평양을 방문하는 등 일본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대 국제상황 및 대일접근을 위한 여건이 호전되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일자세를 접근정책을 취하여 종전의 대일비난 자세를 완화하였으며 일조우호촉진연맹(1971. 11. 16) 등 각종 친북한 단체를 결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이래 일본내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사회당대표단 및 친북단체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였다.

둘째, 일본내 좌경세력과 연대하여 한미일 결속관계 반대 운동과 관련, 북한은 1960년대 초기 사포정권(1964-1972)이 집권하여 미국과의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자 일본내의 좌익정당 및 사회단체를 부추켜 한일국교정상화 회담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한일회담 반대성명을 발표하여(1962. 2. 15 및 12. 13) 일본내 좌익세력들이 이를 근거로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부추켰다. 또한 북한은 일본내 좌익세력과 연대하여 미국의 지원에 의한 일본정부의 군사력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였다.

셋째, 조총련지원과 관련, 북한노동당은 1955년 5월 25일 도쿄에서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결성을 지원하여 이 조직으로 하여금 북한의 대남, 대일정책 수행을 위한 일본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1963년에는 조총련에게 보내는 교육원조금 명목의 정치공작금으로 과거보다 두배 증가한 약 8억엔을 송금하였다. 그 후 북한은 매년 조총련에 8-12억엔 상당의 공작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닉슨독트린 이후 동북아의 데탕트시기였던 1971년에는 지원금을 15억엔 수준으로 증액하였다.

1980년대 일본이 한미일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안보에 연계된 경제원조를 한국에 제공하는 등 한국중시정책을 취하자 북한은 일본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일성은 아사히신문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선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고 말하였고<sup>2)</sup>, 나카소네의 방한(1983. 1)후 중앙통신 논평에서 “미제국주의자와 일본군국주의자 그리고 남조선괴뢰 일파간의 3각군사동맹 결속책동이 최종단계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3)</sup> 또한 북한은 1983. 3월 중국을 통해 한미일결속에 대하여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일본에 전달하였다.<sup>4)</sup>

최근 북한은 한미일 3국간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일-북한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협조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협박수단 확보라는 견지에서 핵개발 및 노동1호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위협정책을 가중시키고 있다.

## 2. 남북한등거리정책 유도

북한은 일본이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정책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본이 대한반도문제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김일성은 “일본에 바라는 것은 한반도통일문제에 방해가 되지 말아달라”는 것과 “일본측의 중립적 입장에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정책 유도를 위해 북한은 일본의 한국우선

2) 朝日新聞, 1982. 12. 3.

3) 내외통신, 종합판, 30호 (1984. 7. 1~12. 31), pp. 162~164.

4) Ibid.

5) 毎日新聞, 1972. 9. 19

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한 접근 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북한은 일본의 미일관계 및 한국중시 정책으로 인하여 급격한 대일접근이 어렵다고 보고 경제 문화관계발전 등 비정치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정치적인 관계개선 기반을 마련하려 하였으며, 최근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까지 진행시키고 있다.

북한의 대일접근과 관련하여 북한은 1955년 2월 25일 남일 북한외교부장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나 당시 기시수상은 유엔중심외교 및 자유주의 국가와의 협조 등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외문화연락협회」를 통하여 일본의 좌익인사나 단체들을 초청하는 민간레벨의 민간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1960년대 일본정부의 대미의존적 외교정책 및 남한 중시정책으로 북한의 대일접근정책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1970년을 전후하여 동북아국제질서가 신국면으로 진입하고 일본이 대북한접근을 적극화함에 따라 북한은 대일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적, 물적 교류증대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김일성은 일본측이 등거리정책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르는 내용의 발언을 마이니치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즉 김일성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선린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한국 일변도정책을 쓰지말고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어떤 침략적 성격도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우리는 일본과 국교관계를 맺기 전이라도 기자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왕래를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 교류 증대를 역설하였다.<sup>6)</sup>

북한은 이러한 대일접근의사를 구체화하여 1970년대 적극적인 대일자세

6) Ibid

를 취하였는 바, 종전의 대일비난 자세를 완화하고 일조우호촉진연맹(1971. 11. 16), 일조수출입상사(1973. 3. 1), 일조국교정상화 국민회의(1973. 9. 9) 등 각종 친북한 단체를 결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3년 10월 사회당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일·북한국교정상화 3원칙<sup>7)</sup>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한미일협조체제가 강화되고 랑군사태와 민홍구하사 밀항사건(1983. 10), 후지산마루호 억류사건(1983. 12), 대한항공기 폭파사건(1987. 11)등으로 일·북한관계는 다시 경화되었으나 1989년 들어 북한은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과 일본의 1987년 7월 참의원선거 및 1990년 2월 중의원선거에서의 일본사회당의 당세 확장을 계기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2개의 조선 정책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일본의 남북한등거리 외교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 3. 일본의 자본기술 도입

북한은 일본을 서방 자유세계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보유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과거 공산권국가 이외의 지역과는 교류가 미미하였으며, 중소분쟁이후 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감소로 인한 공산권국가로부터의 자본 및 생산재도입 제약으로 인해 「제1차7개년 경제계획」(1961~1967), 「6개년 경제계획」(1971~1976), 「제2차7개년 경제계획」(1978~1984)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

7) 첫째, 조선은 하나이며 어떠한 분열정책도 반대한다. 둘째, 김일성이 제시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7, 4 남북한공동성명과 그가 6월 23일에 천명한 조국통일의 5대강령을 적극 지지한다. 셋째, 평화5대원칙에 기초한 조·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의 정경분리정책에 편승하여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까지 발전시키려 하였다.

1954년중 일조무역협회가 결성되었고 1957년 9월 27일 일조무역회와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간에 「조일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북한과 간접무역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북한의 대일관계는 초기 이계다내각(1960. 7-1964. 7)의 대공산권 교역확대를 위한 정경분리정책으로 북한과의 직접무역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며(1963년 무역총액 1500만달러),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증가추세는 지속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서 북 일간 무역거래 증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계획 및 중소분쟁요인과 함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긴밀해져 가는 한일관계를 견제할 필요성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들어 북한은 일본과 1972년 「일조간 무역촉진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하여 일본의 수출입은행 용자와 장기연불수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국간 무역관계자와 기술자 교류 및 상품전람회 개최가 허용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대일본 무역은 1974년 수출 1억 달러, 수입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였고 1980년에는 수출 1억 8천만 달러, 수입 3억 7천만 달러로 일본은 자유주의국가중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1991년도에는 북한의 제2의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4년부터 수출대금 및 플랜트 수출대금 약 7억 달러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수출보험을 중단하였고, 198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북·일간 경제교류는 무역의 90% 이상이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1980년대를 통해 줄곧 매년 무역고가 4억~5억달러 전후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북·일 무역은 북한의 외화부족 등 신용저하, 협소한 시장 및 COCOM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계속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북한간 무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일본에 대한 결제대금의 미지불 등은 북·일 무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일 수출품목은 귀금속류, 동물성 생산품, 섬유, 광산물, 식물성 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품목은 기계류, 전기기기, 귀금속, 수

송기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화학품, 농약 등도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87년 이후 대일본 무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sup>8)</sup>

한편, 북한은 일본의 대북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 9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기술 도입을 위한 합영법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 기간시설 미비, 통신, 전력, 항만 등 시설의 미정비 등으로 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 조총련계 기업인들만이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합영의 건수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에서 84년 9월 합영법 공포이후 1991년 9월 현재까지 7년동안 가동중인 합영기업의 정확한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100여사의 합영사가 북한내에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70% 이상이 조총련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합작 투자 총액은 132억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부진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 농업생산 부진,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에너지 부족 등의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1992년말 서방선진기술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조선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정 발표하였고, 이 3개법령의 후속 조치로 1993년 2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법」,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제정, 외자유치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법들은 1984년 9월 제정된 「합영법」을 대축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특히 「조선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하여 수출입 품목의 비관세와 과실송금 허용, 최고 50년간 토지임대 등 특혜조항들과 함께 투자여건의 다변화를 위한 각종 보장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sup>9)</sup> 그러나 「조선외국인투자법」이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 단독투자를 자유무역지대내로 제한적으로

8)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전동진, 「일본의 대북한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40.

9) 내외통신, 종합판, 47호 (1993. 1~3), pp. 136~140.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 및 기술유치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본의 대북한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으로 미루어 볼 때 북·일수교가 이루어지면 북·일간 경제협력 및 일본 대기업의 북한진출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미국과의 관계개선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최대 위협세력인 미국과 간접적으로 평화협상 추진 및 주한미군 철수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기술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서로 경쟁했던 점을 중시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미·북한 관계개선으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 성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완화 유도 및 서방의 자본 기술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대미접촉 기회를 확대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미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1970년대 일본과의 비정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을 때인 1974년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제의하였고 1978년 북한 허담외교부장은 대미관계개선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은 대일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일본의 대북접근을 자극하려 하고 있는 동시에 대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1990년말 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수교교섭을 추진하였지만 수교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제반문제에서 의견대립을 보였고, 특히 핵문제에서는 번번히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자, 북한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타결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대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일본의 대북한경제지원에 대한 미국의 승락을 받은 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인 대일접근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북한핵 문제를 초강경입장으로 선회시켜 일본을 위협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취한후 미·북한관계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핵문제와 미·북한, 북·일 관계개선, 남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일괄타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북한의 NPT탈퇴선언후 북경주재 일본대사관 관리의 1993년 4월 7일 및 13일 북한대사관 접촉시도에 대한 북한의 거부) 일본의 대북한 접근 자극함과 동시에 대미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미일간에 경쟁을 유도하려는 태도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 및 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로서 대응하고 있고,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한간 회담에 대한 한미일 3각협의체제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1993년 3월 22일 및 8월 12일 한미일 고위급회담), 호소카와 총리의 방한(1993. 11. 6-7)을 통해 한국과의 유대관계 중시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북한은 일본의 한미일협조체제 강화정책에 대하여 “조미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한 적대시정책”으로 비난하면서<sup>10)</sup> 북한의 대일 경시 및 대미 중시정책을 일본측에게 부각시켜 자극하려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일정책은 북한이 일본에 대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든 혹은 일본을 무시하거나 위협하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Ⅲ. 북한의 대일정책 현안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정치 경제 및 안보적 필요에 의하여 대일접근을 모색하여 왔으며,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결하

10) 노동신문 1993. 6. 28; 1993. 7. 3.

기 위하여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북한양측은 1991년 1월 30~31일에 제1차 일·북한수교회담을 개최한 이래 8차에 걸쳐서 수교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양측이 합의한 협상의제와 기타 현안은 다음과 같다.

### 1.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과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를 안보유지수단 및 대미일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양국간 수교회담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현안으로서 제기하고 있다.<sup>12)</sup>

일본정부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유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조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위하여 미국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보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남북한비핵공동선언에 남북상호사찰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3)</sup>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의 북한핵의혹 해소 요구를 일본이 자신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장을 정당화 내지 은폐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sup>14)</sup> 일본의 핵무장화를 저지하는 것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sup>15)</sup> 이와 관

11) Peter Hayes, “核の引き延ばし作戦,” 『世界』, 第587號 (1993年 10月號), pp. 287~297.

12) 森本敏, “九十年代末に緊迫する東北アジア,” 『世界週報』, 1992. 4. 28, p. 14.

13) 山本剛士. “北朝鮮を語る前提,” 『世界』 第587號(1993年 10月號), pp. 262~263;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Summer 1992), pp. 61~62.

14) 송무경, “결과 속이 다른 일본의 핵정책,” 로동신문, 1993. 8. 4. 또한 북한은 제6차 북·일수교회담(1992. 1. 30~2. 1)에서도 일본의 플루토늄 축적상황을 지적하였다. 朝日新聞, 1992. 2. 2.

런, 북한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및 핵연료 재처리 공장건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 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靑森)縣 롯카소무라(六ヶ所村)에 세계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하였으며, 북한은 이러한 일본의 플루토늄 확보 노력 및 핵재처리시설 건설 노력에 대한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핵사찰 수용 압력의 부당성을 반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압력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북한핵위협이 존재하고 핵보유국과 비핵국사이에 불평등하다는 점을 들어 1995년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조건적인 무기한 연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북한핵문제에 대한 서방선진국들의 보다 강경한 조치를 바라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1993. 7. 8).<sup>16)</sup> 또한 호소카와 총리는 최근 유엔총회연설(1993. 9. 27)에서 북한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해소를 강조하였고,<sup>17)</sup> 1993년 9월 24일 일본중의원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북한 국교정상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8)</sup>

이러한 일본의 IAEA사찰 및 남북상호사찰 촉구에 대하여 북한은 자신의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고 일본의 핵사찰 수용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자신의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북한수교 및 일·북한수교 그리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sup>19)</sup>

북한은 일본의 핵문제 제기가 미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인식하고, 외교부대변인 담화(1993. 10. 16)를 통해 “일본 등 각국들이 핵문제를 구실로 압력을 계속 가한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할

15) 송무경,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93. 9. 28.

16) 朝日新聞, 1993. 7. 9.

17) 朝日新聞, 1993. 9. 29.

18) 朝日新聞, 1993. 9. 25.

것”이라고 위협하였다.<sup>20)</sup>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핵확산금지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유엔에서 대북한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1993. 5. 8) 후에 북한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수락하였다. 미·북한 양측은 제네바회담(1993. 7. 19)에서 미국측이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함한 무력사용 및 위협을 포기하고 북한핵시설을 경수로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대가로 북한이 IAEA와의 협상 및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한회담을 재개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sup>21)</sup>

1993년 7월 제네바 제2차고위급회담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문제는 IAEA와의 협상 및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한회담이 진전이 없어서 미·북한간 제3차회담을 개최하지 못한채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애커먼 미하원 아태소위 위원장을 수행한 퀴노네스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에게 “수교내지 이에 준하는 조치”를 미국이 보장해 준다면 특별사찰문제 등을 포함한 핵문제 전반에 걸친 사안을 총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10월 22일 알려졌다. 21일 뉴욕에서 열린 허중 주유엔 북한차석대사와 하바드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간의 남북한간의 접촉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북한의 제의는 핵과 수교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핵문제와 「미·북한수교」를 연계 처리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IAEA 임시사찰을 수용할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등을 검토중이며, 수교문제를 포함한 각종 대북조치들을 1)IAEA의 임시사찰이 실시되고 2)남북한특사교환논의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뒤에 총괄 협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 伊豆見元, 高野紀元, “北朝鮮の現状をどう讀むか,” 「外交フォーラム」, No. 57 (1993. 6), pp. 16~28.

20) 朝日新聞, 1993. 10. 17.

21) 朝日新聞, 1993. 7. 20 夕刊.

향후 미국은 북한이 제기한 핵위협 완화와 IAEA사찰의 공정성 제고 그리고 관계개선 등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IAEA핵사찰 수용 및 남북한상호사찰 실시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사일은 「로동1호」와 「로동2호」로서 이 미사일들은 핵 또는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본은 이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무기로서 핵개발문제와 함께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sup>22)</sup> 나카니시(中西啓介) 일본방위청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방위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우려표명에 대해 북한은 로동1호 개발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위협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침략을 위한 무력증강을 지속해온 일본이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sup>23)</sup>

북한은 핵 및 미사일개발에 의한 대일 위협을 통해 대일 수교협상에서 입지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으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미사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일수교협상력 강화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2. 보상문제

북한은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물

22) 中川八洋, “「勞働一號」を迎撃できるか”, 諸君, 第25卷, 第8號(1993. 8), pp. 168~175.

23) 김종선, “미사일 위협은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다,” 로동신문, 1993. 10. 10; 홍황기, “공공연한 무력증강 설교,” 로동신문, 1993. 10. 11.

질적인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식민지시대 일·북한관계가 국제법상 교전관계였다는 인식으로부터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전후 40년에 대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인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법률에 의해 행해진 일은 합법이며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측은 국제법상 일본과 북한은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제2차 수교교섭)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정한 틀과 적합성 내에서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일간에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경제문제는 재산청구권문제로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일·북한수교교섭에서도 재산청구권으로서 취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경우 “피해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본은 재산청구권교섭을 거부하였다(제4차 수교교섭). 이와 관련 일본측은 일본이 가한 손해가 어떠한 자료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유로 사망 혹은 부상당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증거서류 제출 등 객관성과 구체성이 있는 법적 입증을 요구하였다.<sup>25)</sup>

이에 대하여 이미 제1차회담에서 사상범, 징용, 징병, 정신대의 규모나 약탈된 금, 은, 철광석, 쌀, 목재의 수량을 제시한 바 있는 북한은 일본측 이야말로 필요한 법적인 증거를 미리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제5차 및 6차회담).

일·북한 양측은 식민지 지배의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청구권 혹은 보상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일·북한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고 있는 한국국민의 심리적 반일감정도 의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10월 28일 중앙방송 보도를 통해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고종황제의 친서가 최근 발견된 사실

24) 朝日新聞, 1991. 3. 12.

25) 朝日新聞, 1991. 9. 3.

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로써 이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한일조약 적법성 주장을 반증하려 하고 있으며,<sup>26)</sup> 종군위안부문제에서도 한국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보상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sup>27)</sup>

### 3. 과거청산 문제와 관할권문제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 북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은 제1차 수교교섭(1991. 1.30)에서 제기한 것은 식민지지배는 불법이면서 무효라는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가 사실상 시작된 1905년 을사조약은 불법임과 동시에 무효이며 그것을 전제로 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그후 조선에 대하여 강요한 모든 조약이나 협정이 불법적인 것이고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8)</sup>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죄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북한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 및 사과 요구에 대하여 성의를 표시하기 시작하였지만,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지배로 보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대하여 북한은 일본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인정과 성실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sup>29)</sup>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 여부 및 사죄 표명

26) 동아일보. 1993. 10. 24; 1993. 10. 29.

27) 김정옥, “일본의 전후 보상은 국제적인 요구,” 로동신문, 1993. 9. 27.

28) 李三魯, “國交正常化のための朝 日政府間の會談について,” 「朝鮮資料」, 通卷 第 388號 (1993. 9), p. 18.



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한 보상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칙론적인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식민지배 문제를 일본측에 제기함에 있어서 남북한의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韓日協調體制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sup>30)</sup> 특히 최근 한국학계에서는 당시 조약문서의 원본에 당시 황제 고종의 승인인장이 없다는 것과 황제로부터 대신에게 준 위임장이 없다는 것을 무효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고종황제가 을사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지 7개월후인 1906년 6월 22일 일본과 청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등 9개국 국가원수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 친서가 발견됨에 따라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크게 보도함으로써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강력히 제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표명은 일본과의 보상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양국간의 수교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정권의 출발시기를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운 항일무장 투쟁시기로부터 보고 현재의 북한정권을 그 연장선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sup>31)</sup> 항일투쟁과 관련되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 북한은 일·북한 수교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sup>32)</sup>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보수적인 지식인들은 남한의 문헌에 의존하면서 북한 현지도집단이 과연 항일운동의 주체적인 세력이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김일성이 해방 당시까지 무장투쟁을 하였던 그 명성있는 김일성과 동

29) 윤우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파렴치성,” 로동신문, 1993. 9. 19.

30) 朝日新聞, 1992. 9. 1.

31)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 第587號 (1993年 10月號), pp. 268~277.

32) 佐佐木春隆, 『韓國獨立運動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85), pp. 830~47.

일인물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문헌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북한정권과 항일투쟁시기의 항일운동세력과의 연결이 약하거나 단절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정통성과 관계되는 항일무장투쟁 인정문제는 일·북한 사이에 보상문제와도 연관되어 양측간에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교전국간의 배상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북한과는 전쟁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청구권의 관점에서 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33)</sup>

최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에는 현실적으로 두개의 정부가 존재함을 북한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자신만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지닌 정부로 인정받으려는 요구가 무리한 주장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일항쟁론에 입각한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 및 합법성 주장은 일·북한간 수교교섭이 진전되어 가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북한은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문제 진상조사 결과 발표(1993. 8. 4)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위안부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진상조사 및 공개와 함께 1)책임있는 자들의 형사처벌, 2)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죄표명과 보상 등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외교현안으로 제기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하여 매국적 행위로 규정 비난하였다.<sup>34)</sup> 또한 북한은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들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1)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 2) 일제과거사의 인정 및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국회결의 채택, 3) 유엔에서의 공식사죄를 촉구하였다.<sup>35)</sup>

북한은 종군위안부문제에 관해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북-일 수교회

33) 中平立, “日朝交渉の現場から,” 「外交フォーラム」(1992년 2월), pp. 46~50.

34) 8월 6일 외교부대변인 담화

35) 김중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 「노동신문」, 1993. 8. 9.

답에서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사실인정 및 사죄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촉구 하였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차진상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종전과는 달리 종군위안부문제에 일본정부와 군대가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등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이와 같이 대일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종군위안부문제가 북한을 제외한 채 한일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불만표시와 북한도 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군위안부문제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일간의 협력관계를 이완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일본의 정계재편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호소카와 내각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 표명으로 종군위안부문제를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셋째, 북한이 종군위안부문제에서 일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보다 확실히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본에서 연립정부 출범을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대일수교협상에서 협상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종군위안부문제 및 과거사문제 등 보상문제에서 당분간 강성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은 가능한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할 것이나 대일 경제원조 획득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국 정치적으로 보상문제를 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권관할권문제와 관련, 북한은 3당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조선은 하나”라는 입장으로부터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일·북한수교를 추진하는 이유로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북한수교는 연방제하의 북쪽 구성국과 일본이 장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경우 진정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sup>36)</sup> 따라서 교차승인 개념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남북이 두개의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

36) 兪哲, “キーポイント,” 「新しい世代」1991年 2月號, p. 21.

였으며 분단이라는 현상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당한 기술방법을 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은 제4차회담(1991. 8. 30—9.2)부터 북한의 관할권을 휴전선 이북으로 할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조총련문제

북한은 조총련계 조선인을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일·북한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조총련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조총련계 기업인의 대북한진출 및 그들과의 경제교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조총련은 일본 니가타와 북한간을 오가는 북한의 만경봉호 편으로 수백 만엔의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북한의 친지를 방문하는 조총련계 조선인과 일본인들로 하여금 1인당 300만엔씩 지참하도록 하고 있고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내 합영기업의 형태로 투자한 함으로써 1년에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유입되는 돈은 약 600억엔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총련은 합영회사에서 만든 화장품 등 물품 구매운동을 벌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7)</sup> 최근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해결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조총련의 대북한 송금 금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인도적인 이유와 조총련의 격렬한 항의 등 일본국내에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대북한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가 결정될 경우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동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일조총련의 대북한 송금문제도 제재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일·북한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호전된 일·북한간 경제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진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조총련계 기업의 북한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경제특구에서 개발우선권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투자법을 개

37) 佐藤勝巳, “金正一の「惡魔の選擇」,” 「文藝春秋」, 第71卷 第5號(1993. 5), pp. 205~206.

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조총련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일·북한수교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주로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국민의 공적재산(조총련의 토지, 건물 등)을 국유화하는 법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총련은 막대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조총련 각급기관, 산하단체, 사업체, 조선인학교 등이 일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현시가는 대개 약 5000억엔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총련은 재정의 70%를 재일조선상공인들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최근 2, 3세로의 세대교체로 교포의 조직 이탈이 가속화함에 따라 재정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조총련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총련 중앙 및 지방본부에 직영기업을 설립하여 찌찌코 및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조총련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화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조총련의 북한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활동해 온 조총련이 경직된 사회주의 체제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북한의 경영에 적용하기 힘들게 되어 조총련 이탈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8)</sup> 이와 관련 조총련은 1993년 7월초 김정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부의장 허종만을 책임부의장에 임명하였는 바,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1986년 9월 이후 조총련의 재정, 경제담당 부의장직을 맡아 대북지원 역할을 담당해 김정일의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덕수의장의 병세악화를 계기로 조직주도권 장악을 위해 이진규 제1부의장과 조총련 조직내에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종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허종만이 조총련의 부동산을 부당하게 처분, 북한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 일본과 수교한 후 조총련의 재산을 국유화하려 할 경우 조총련의 재일재산 처리를 둘러싼 논쟁 및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sup>39)</sup>

38) 野口均, “朝總聯に何が起きているか,” 「諸君」, 第25卷 第8號 (1993. 8), pp. 218 ~227.

#### IV. 결론 : 일 · 북한수교 및 북한의 대일외교정책 전망

북한은 최근 북한체제 자체의 한계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중단으로 1992년 마이너스 7% 성장을 보이는 등 3년연속 뒷걸음 성장을 보여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북한은 국내적으로 부분적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1991년 12월에는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고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하였다. 1993년에 들어서는 1월에 「외환관리법」,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채택함으로써 1992년말의 대외개방 관련 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에서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을 추진하였던 실용주의적 대외개방파인 강성산을 총리로 기용하였으며 김달현을 국가계획위원장에 기용하였다.

북한의 이와같은 조치들은 비록 현재로서는 북한 핵문제로 서방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외개방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치들이라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현재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국면전환을 위한 계기를 찾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등 강경입장은 대외개방 단행 및 김정일체제로의 정권이양에 대비한 국내 체제 정비용 및 대미일 협상 타결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한 협상 지위 강화용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을 보여 국내적으로 긴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김정일의 위기관리능력을 국내적으로 과시, 권력이양을 촉진하고, 동시에 대일수교 및 대미관계개선에 있어 최대한의 양보를 얻으려 하고 있다.

39) 유호열외, 「북한의 대남동향(1993. 7~9)」(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27~35.

따라서 북한은 현재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 제재움직임이 시동되어 협상수단으로서의 핵카드의 효용도가 감소해 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핵문제를 일정시점에서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과 일괄타결방식에 의하여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미일 양국의 다양한 양보조치 대가로 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일·북한수교 교섭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 출범한 일본의 호소카와 내각은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일·북한수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북한 수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식민지 보상에 있어서 청구권방식으로 할 것인가 혹은 배상형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역사해석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을사조약과 합병조약 등 구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항일투쟁 등을 들어 보상과 함께 전쟁의 전승국으로서의 배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무한정 명분만을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북한이 전쟁당사국 지위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또한 일본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회담속도를 조절하여야 하고 일본 내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므로 너무 수교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일·북한 수교교섭 진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김정일에 대한 안정적인 권력이양이 북한정권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은 체제보장 및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일수교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